

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(2017.8.17일)
- 공·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 -

「생산적 금융」과 「포용적 금융」의 이론적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

2017. 8. 17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김 용 범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I . 들어가며	1
II .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	3
II-1. 생산적 금융	3
가. 기존의 금융 이론 · 관행 · 정책에 대한 성찰	3
나.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	5
II-2. 포용적 금융	7
가.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	7
나.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	10
III . 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	11
III-1.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찰	11
가. 「생산적 금융」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	11
나. 「포용적 금융」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	14
III-2. 우리 보험산업의 과제	15
IV . 맺음말	17

I. 들어가며

- 1985년, 하버드대 교수였던 로렌스 서머스*(Lawrence H. Summers)는 「On Economics and Finance」라는 자신의 논문**을 통해서 ‘케첩 경제학(Ketchup Economics)’이라는 표현을 처음 소개

* 하버드대 교수(1983년~), 제71대 재무장관('99.7월 ~ '01.1월)

** 1985년, Journal of Finance에 게재

- ‘케첩 경제학’은 정통 경제학자가 갖고 있던 금융 경제학자, 금융 종사자, 금융당국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담고 있음

- 정통 경제학자는 케첩시장을 평가할 때, 원료(토마토) 가격, 대체재(substitutes) 시장, 임금 등 경제시스템의 전체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나,
-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금융 경제학자 등은 케첩의 상대 가격비교만으로 케첩시장이 효율적인지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실수*를 저지른다는 것임

* 2쿼트 케첩병의 가격이 1쿼트 케첩병의 2배 정도이면 시장가격이 적절하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논리를 전개

-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'07년, 경제학의 대가인 로버트 쉐러(Robert Shiller)와 유진 파머(Eugene Fama)간에 ‘케첩 경제학’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음

- 시카고 경영대 교수(금융경제학)였던 유진 파마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‘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전반적인 주택시세에 따라 잠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은 합리적이고 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’고 발언
- 그러자,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쉐러는 '07년 출간한 그의 저서 ‘비이성적 거품(Irrational Exuberance)’에서 이러한 논리가 전형적인 ‘케첩 경제학’이라고 비판

※ 아이러니하게도 자산가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한 두 사람은 '13년에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공로로 나란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

□ '08년 금융위기는 두 논쟁의 '현실 적합성'을 테스트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, 또한 금융부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와 그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함

-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임원 그리고 금융 경제학자 등은 '08년 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,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였음

□ '케첩 경제학'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히 '정통 경제학자'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

- 금융당국을 포함한 '금융 경제학자', '금융업 종사자'들이 전체 경제시스템이라는 큰 틀 속에서 '금융시장'을 분석해야 하며,
- '이론 없는 현장은 맹목이고, 현장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'는 말*처럼, '학계(Academia)'와 '현실(Field)'의 지속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

* "개념없는 직관은 맹목이요, 직관없는 개념은 공허하다." (Immanuel Kant)

□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업계의 여러 교수·학자분들, 보험사·보험개발원 등의 보험실무 담당자 분들이 함께 모여,

- 「공·사보험의 역할과 향후 조화로운 발전방향」을 토론하는 오늘 이 자리는

- 앞으로 우리의 사회·경제시스템 속에서 보험산업이 나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□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헌수 보험학회장과 여러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□ 저는 오늘 다음의 2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

- ① 새정부 금융정책의 두 가지 '핵심 가치(Two Pillars)'인 「생산적 금융」과 「포용적 금융」
- ② 이러한 관점에서 「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」

Ⅱ.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

1. 생산적 금융

가. 기존의 금융 이론·관행·정책에 대한 성찰

- 「생산적 금융」을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“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
 -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의 핵심적 기능은 선별기능(screening)을 통해 한정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
 - 금융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면, 이를 마중물 삼아 혁신적 기업이 등장
 - 낡고 오래된 지식·기술은 혁신적 도전이라는 창조적 파괴(Creative Destruction)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혁신·성장
 - ⇒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전반이 활력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
 - 그러나, 그 동안 금융은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(trading), 모기지 금융 등에 치중하면서 자금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, 거시경제의 취약성(vulnerability)을 초래
 - 라구람 라잔(Raghuram Rajan)*은 ‘자본주의의 역동성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‘대형 금융회사와 그 임원’을 지목하고
- * 최연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, 前 인도 중앙은행 총재
- 금융이 레버리지 창출과 단기 트레이딩에 치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 (「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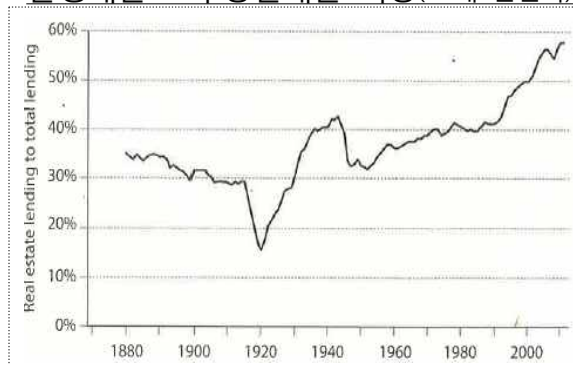
□ 또한, 저명한 정책 당국자들은 ‘금융’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경제시스템의 ‘불필요하고 위험한 부분이 비대화’되고 있는 점을 우려

- 영국 금융감독청장으로 금융위기 대응을 진두지휘한 Adair Turner, 前 영란은행 총재였던 Mervyn King 등은
- ‘금융’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, 향후 금융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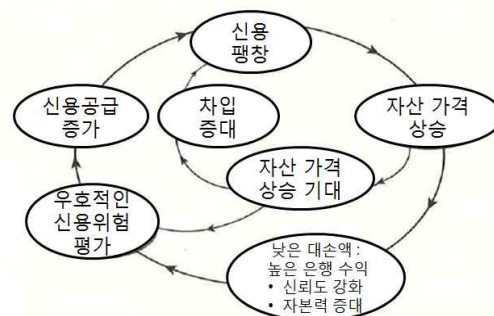
※ (참고) Adair Turner(前 영국 금융감독청장) : ‘Between Debt and the Devil(’16년)』

- 은행 등 금융회사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대신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의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용(credit) 팽창
- * 영국 은행의 대출 중에서 약 80%가 부동산 대출이며, 非부동산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14%에 불과(’12년 기준)
- 이러한 방식의 신용(credit)은 금융불안을 고조시키는 경제적 공해 (economic pollution)와 같음
- 빚(credit)에 의존한 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자본규제와 거시건전성 수단(LTV 등)을 통해 이러한 잠재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

은행대출中 부동산대출 비중(17개 선진국)



신용과 자산가격 사이클



※ (참고) Mervyn King(前 영란은행 총재) : ‘The End of Alchemy(’16)』

- 그간 세계 경제시스템에는 부채, 성장구조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 (imbalances)이 누적되었고,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
- 화폐와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연금술이 아님이 드러났고, 오히려, 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(The Achilles heel of capitalism)이 되었음
-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화폐와 금융이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임

□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·혁신적 분야보다는
가계대출,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집중 공급되는 불균형 심화

❶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
'손쉬운 가계대출'에 안주

*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(% , 한은) : ('98) 27.7 → ('16) 43.4 [+15.7%p]

❷ 차주(가계·기업)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,
담보·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에 안주

*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·보증대출 비중이 여전히 약 70% 수준('17.4월)

❸ 벤처·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미흡

* GDP 대비 벤처투자자금('15, %) : 한국 0.08, 미국 0.35, 이스라엘 0.38

➡ 금융의 '본질적 기능'을 되돌아보고 그간 누적된 경제·금융
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

나.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 : Back To Basics

□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

- ①지급·결제, ②대출자(lender)와 차입자(borrower)간 매칭,
③개인 자산관리, ④위험관리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음

※ (참고) John Kay(FT Columnist) : 「Other People's Money(2015)」

○ 금융은 크게 4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와 경제에 기여

- ① 지급·결제시스템(payment system)
→ 임금을 받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단
- ② 금융 중개기능(intermediation)
→ 저축된 자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효과적으로 활용
- ③ 재산 관리(personal finance management)
→ 우리의 생애 및 세대에 걸쳐서 개인 재산을 관리를 지원
- ④ 위험 관리(risk management)
→ 가계·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뒤따르는 위험 관리

□ 그러나, 현실 속의 금융은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,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와 비판을 야기해 왔음

- ① [Adair Turner] 금융부문의 부동산 대출 위주의 **과도한 부채 증가가 2008년 위기를 초래**하였고, 이에 따라 **막대한 위기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**
(⇒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10% 이상 하락)
- ② [Mervyn King] 과잉저축(savings glut), 은행자산의 과도한 팽창(banking glut)이 결합되어 **세계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(disequilibrium) 지속**

□ 금융이 경제시스템 불안을 확대시키지 않고, 현대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, '본연의 기능'을 회복해야 함

- 금융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이러한 '본질적 기능'을 통해 가계·기업, 우리 경제시스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

* 금융의 경제적 가치는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과 사업수익만으로 단순히 측정되고 평가될 수 없음

- 지금처럼, '고객의 돈(Other people's money)'으로 '레버리지 확대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'에 몰두하면,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는 계속될 것임

➡ 4차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이 성공적으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

➡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는 「생산적 금융」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

➡ ①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, ②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, ③제도적 장애요인 제거, ④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 아래 「생산적 금융」 관련 과제를 발굴·추진

2. 포용적 금융

가.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

- 「포용적 금융」의 필요성은 ‘금융’과 ‘금융정책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
- ‘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‘금융업계의 탐욕과 무책임’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,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
 - 선진국에서 대형 금융회사 임원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수십배가 넘는 막대한 연봉을 벌어들였지만,
 - 정작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납세자(taxpayers)가 짊어졌음

※ (참고) ‘11년, 뉴욕에서 시작된 ‘월가를 점령하라(Occupy Wall Street)’ 시위가 전세계 1,500여개 도시로 확산되기도 하였음

→ 당시, 로이터 통신이 미국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% 이상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계의 개혁이 미진했고,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미흡했다고 답했음

- 이에 따라, 現 금융시스템의 구조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계,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
- ① 현재 은행의 담보대출 구조는 자산가격 변동 위험을 과도하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킴 (은행 등 금융기관은 제한적으로만 위험 부담)
 - 예컨대,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4억원 대출(차입자(고객) 자금 1억원)을 받으면,
 - 아파트 가격이 20% 하락할 때까지 은행은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, 차입자가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짐

② 이러한 구조 下에서 은행은 위험을 등한시(neglect risk)하고 과도하게 부채를 공급할 유인이 존재

- 특히, 은행은 부분지급준비금제도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신용을 창출*할 수 있어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부채 과잉공급

* 영국의 경우 통화의 2%만이 지폐와 동전이며 98%는 신용창출의 결과
(Adair Turner, Between Debt and the Devil))

③ 반면, 은행이 공급한 과잉 부채로 인해, 자산가격의 하락과 경기불황의 피해는 가계(특히 서민·취약계층)에 집중되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

※ (참고) Atif Mian(프린스턴대 교수) & Amir Sufi(시카고대 교수) : House of Debt('14년)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불황은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증가하도록 방치·조장한 금융시스템이 불러온 인위적 재앙
- 부채금융(Debt-financing) 체제에서 자산가격 하락은 차입자의 과도한 재산손실,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제불황을 초래

* 가계부채가 많고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진 국가와
'08년 이후,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국가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

- 자산가격 하락의 피해를 가계가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 하에서 소득불균형 심화
→ '빛은 닮아 닮아 가계에 위험을 전가하는 역(逆)보험(anti-insurance)'
→ 금융회사는 추가 부담없이 풋옵션(put option)을 보유하고 있는 것

□ 하지만,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,

- 금융은 '사회문제 해결에 기여'하고, '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'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

□ 월가에 대한 비판론자인 로버트 쉘러 교수도

그의 저서 「**Finance and the Good Society**(2012)」에서

- 금융은 보건·교육·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며,
- 금융회사의 '인센티브 구조' 등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금융은 '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'라는 원대한 목표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

* Finance의 어원은 목표, 완성이라는 뜻의 라틴어 'finis'에서 유래

□ 특히, 이러한 인식은 국제 사회에서도 지속 확대되는 추세

- '08년 금융위기 이래,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,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

* '17.7월 G20 독일 정상회담시 「**2017 금융포용 행동계획(FIAP)**」을 채택
(주요내용 : 금융관련 국제기준 마련 및 금융부문 평가시 금융포용 우선 고려,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 정책 강화, 시장활용한 혁신적 금융포용 증진 등)

- '**재무적 수익성**'과 '**사회문제 해결**'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'**임팩트 금융**'*도 주목받고 있음

* 금융기관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주거, 교육, 보건, 환경 등 사회적 가치(이익)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

① 사회적 가치와 재무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'임팩트 투자'와

② '소액금융지원'(microfinance)를 결합한 개념으로 통상 이해됨

※ (참고) 임팩트 금융 관련 주요국 사례

미국	지역개발금융(CDFI :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) 펀드 : 지역금융기관이 낙후지역 등에 투융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약 1%를 보상하여 낙후지역 투융자를 간접 지원. 약 1,000여개의 지역금융기관이 이용
영국	자선은행(Charity Bank, 2002년 설립) : 주택, 사회복지, 교육, 건강, 예술 등의 사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매년 250억원 이상의 수익 실현 중
네덜란드	트리오도스 은행(Triodos Bank, 1980년 설립, 자산규모 12조원 수준) : 재생에너지,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투자하여 매년 150억원 수익 실현

- ☐ 우리 금융의 포용성(Financial Inclusion)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음

※ (참고) World Bank의 금융포용성(Financial Inclusion) 지표(2014)

- 25세 이상 인구중 금융회사 계좌 보유비율 : (韓)96.9%, (英)100%
- 15세 이상 인구중 소득 하위40% 계층의 계좌 보유비율 : (韓)92.4%, (英)98.3%
- 15세 이상 인구중 소득 하위 40% 계층의 대출경험 : (韓)13.2% (英)38.3%

나.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

- ☐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의 노력 필요

- ① 취약계층, 창업·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
- ② 정책금융의 한정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금융부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·인센티브 재설계

- ☐ 우선,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서는

- 저소득·저신용자 등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한되거나, 금융서비스의 편익이 고소득·고신용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

- ☐ 민간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

- 건전한 사회·경제시스템 유지와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 관점에서,
- 연체자 재기지원 등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중요한 가치라는 ‘인식의 전환’이 일어날 수 있도록, ‘법·제도적 인센티브’가 재설계될 필요

➡ 이러한 관점에서, ❶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계층과 ❷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*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

* ❶ ‘Thin Filer’ 등 정확한 신용등급이 없어 중·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·대학생 등 중·저신용자,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는 장애인, 노년층

❷ 한계차주, 고금리대출 이용자, 연체자, 장기연체자 등

Ⅲ. 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

1.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찰

가.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

- 우리 보험산업은 외형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, 질적인 측면에서 '위험 관리'라는 본연의 기능은 미흡

※ (참고) 국내 보험사업의 외형적 규모

① (수입보험료)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세계 7위 수준

(단위 : 억달러, %)

순위	생손보 규모(Swiss Re Sigma)			국내총생산(GDP) 규모 (IMF)		
	국가	수입보험료	점유율	국가	GDP	점유율
1	미국	13,523	28.6	미국	18,569	24.9
2	일본	4,713	10.0	중국	11,218	15.1
3	중국	4,661	9.8	일본	4,939	6.2
4	영국	3,042	6.4	독일	3,467	4.4
5	프랑스	2,376	5.0	영국	2,629	3.2
6	독일	2,151	4.5	프랑스	2,463	3.1
⋮	⋮	⋮	⋮	⋮	⋮	⋮
7	한국	1,709	3.6	한국(11위)	1,411	1.9

② (수익성) 보험사의 당기순이익도 6조원 내외의 양호한 수준

단위(조원)	'13년말	'14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.1분기
생명보험	2.1	3.2	3.6	2.4	1.6
손해보험	1.4	2.3	2.7	3.5	1.2
합 계	3.5	5.5	6.3	5.9	2.8

③ (건전성)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 비율도 250%에 육박

RBC(%)	'13년말	'14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.1분기
생명보험	286.2	310.4	278.3	240.6	246.7
손해보험	261.1	256.3	244.4	227.9	232.3
합 계	278.4	292.3	267.1	236.5	242.1

①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·판매가 미진 ⇒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 발생

-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 보장의 경우,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/저축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됨에 따라

■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과잉·불필요한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 제약

- ‘붕어빵식 상품 베끼기’ 등으로 혁신적 상품 개발 미진 → 그리스 신화의 ‘프로스쿠스테스*의 침대’를 연상

* 그리스 신화 속 강도 : 행인을 붙잡아 철로 만든 침대에 맞춰서 키를 늘리거나 자르는 방식으로 살인·약탈 ⇒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남을 맞추는 것을 의미

※ (참고) 가계 실생활과 관련된 소액보험 사례

-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중이나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
- 이러한 보험은 손해율이 양호하여 단독상품으로도 충분히 판매 가능

보험상품	보장내용	위험보험료(연간)	손해율
· 자전거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	·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의 신체/재물에 발생시킨 손해	1,238원(실손, 1억한도)	116%
	· 자전거 운행중 본인 상해	90원(정액, 1000만기준)	
· 스키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	· 스키를 타던 중 타인의 신체/재물에 발생시킨 손해	2,031원(실손, 1500만한도)	45%
	· 스키를 타다가 본인 상해	480원(일반)/4,060원(직업) (정액, 1000만기준)	
·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	· 지하철, 버스, 항공기, 철도 탑승중 상해	대중교통이용중 40원 (정액, 1000만기준)	83%
·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	· TV, 세탁기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렌지 고장시 실제 수리비	2,019원 (정액, 10만기준)	7%
· 민사소송보험	· 소송사건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비용	43,922원 (정액, 2000만기준)	6%
·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	· 가족의 일상생활 중 사고(누수, 어린이 장난 등)로 발생시킨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	2,363원 (실손, 1억한도)	237%

② '자율주행', 'IoT', '헬스케어', '전기차'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新상품 개발을 위한 업계 전반의 준비도 미흡
⇒ 기술혁신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여력 부족

- 사람이 자동차의 주행을 통제하지 않는 '완전 자율주행' 기술이 보편화되면 '보험'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*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

*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 vs. 운전자 배상책임 보험

- IoT 기술,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 관리 기법 등 도입과 함께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

* (사물인터넷 활용) 누수탐지 센서, 연기감지기, 운전습관 평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상품 개발

* (헬스케어 융복합 상품) 웨어러블 기기,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의 생활습관, 건강관리 노력 등에 관한 정보를 집적/관리/분석하고 계약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,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상품 활성화

③ 보험료율 산출, 언더라이팅(Underwriting) 등 보험업 본연의 기능인 위험평가·관리 역량도 미흡

⇒ 저축성 보험 판매 등에 주력하면서, '위험 관리'라는 보험 회사 본연의 역량 강화에 소홀

- 해외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경험, 서베이, 국제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, 종합적 언더라이팅 등을 통해 체계적 위험을 평가·관리

- 반면, 국내 보험사는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 보험료율(이른바 '협의요율')에 의존하는 등 위험평가·관리 역량이 미흡

* 기업성보험(상해보험 제외) 중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한 비중
: ('11년) 79.1% → ('13) 80.9% → ('15) 79.2%

나. 포용적 금융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

□ 보험은 가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·관리하여 사회안전망(Social Safety Net) 역할을 담당

○ 이는 보험산업이 「포용적 금융」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라는 점을 시사

□ 그러나, 그간의 우리 보험산업이 본질적 역할에 소홀하면서, 포용성은 약화되고, 국민의 신뢰도 하위권

① 보험금 지급 등 보험관련 민원은 소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(63.7%)을 차지하고,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
*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(천건) : ('14)44.1 ('15)46.8 ('16)48.6

② 전국민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(가입자: 약 3,300만명)과 건강보험간 조화로운 역할에 대한 논란 발생

➡ 기본으로 돌아가서(Back to Basics) 하루빨리 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함

○ 국민 경제의 안전판으로서,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함

○ 특히, 국가 및 공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'포용적 복지국가' 건설에 기여할 필요

※ 「100대 국정과제」 -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- (전략4) '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' ⇒ 사회보장, 노후생활 보장, 건강관리 지원 등

나. 우리 보험산업의 과제

- ◆ ①본연의 위험평가·관리역량 강화, ②4차 산업혁명 등 혁신 기술 활용도 제고, ③민간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등
➔ 3가지 원칙 하에 「생산적·포용적 금융」의 가치 실현

[❶ 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(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 등 활성화)]

① (간단보험 활성화) 국민이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(단종보험)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·방식 확대 등 개선

* 예 : 항공사(항공권) - 여행자보험,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- 보증기간연장보험
공인중개사 - 전세금보장보험, 인터넷 레저용품판매 - 레저보험, 스키보험 등

○ 전세금 보장보험을 지속 활성화하여 가계의 전세금 걱정 완화

* 가입건수 : ('15) 14,156 → ('16) 15,705 → ('17.1~7월) 10,389
단종보험대리점(공인중개사) : ('17.3월) 35개 → ('17.7월) 116개

○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1회성 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·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

○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

② (보험의 경쟁력 제고) 보험회사가 스스로 사고위험·요율을 평가·관리하여, 자체 위험보유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

* 경영공시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, 보험료 산출·신고체계 개선

○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'외형만 큰 보험사'와 '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'간玉石가리기 필요

③ (상품 자율성 지속 확대) 표준약관의 작성주체(보험협회)를 금융당국에서 민간(협회)으로 이전하여 창의적 상품개발 여건 조성

* 자본법·여전법 등은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신고

[②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 촉진]

- ① (보험과 헬스케어간 융·복합) 나이·성별 등 전통적인 요소 외 개인별 운동·식사·생활습관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차별화 하는 핀테크형 고객별(tailor-made) 보험 필요

※ 웨어러블 기기,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보험 약관에 반영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완료('17.1월)

-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시 법령해석 등 불확실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'(가칭)혁신상품 가이드라인' 마련 등 지원

- ② (자율차전기차 보험 활성화) 자율 주행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 필요

- 전기자동차의 위험도가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험 활성화

* 특약반영, 새로운 보험료 산출(개발원) 등을 통해 현재 전기자동차 보험료를 약 10% 인하 가능

[③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]

- ① 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

- ① (실손)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 손해를 하락효과 정밀 분석 및 現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

- 유병자·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

- ② (자동차)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 지속 확보

- ② '보험다모아' - '포털, SNS' 연계 등을 통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

* '17.8월말부터, 「다음(카카오톡) - 보험다모아」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검색 및 카카오톡에서 손쉽게 보험료 비교가 가능토록 할 예정

* 자동차보험(8월) → 실손보험·연금보험·여행자보험(18년) 등으로 확대

IV. 맺음말

□ Financial Times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존 케이는

「Other People's Money(2015)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음

○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금융회사의 건전성·유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'단기적으로 적절한 대응'일 수 있었겠지만,

- 장기적으로 '금융산업'에 필요한 정책과는 거리가 있음

* 바젤Ⅲ의 규정집을 길게 만들어 세세하게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

○ 금융 규제의 주된 목적은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일에 요구되는 성실함(loyalty)과 신중함(prudence)을 붙여 넣는 것이어야 함

- 세세한 행위규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규제준수에 매몰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의 윤리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음

□ 이는 당국의 노력과 함께, 보험을 비롯한 금융 현장(Field)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

○ '타인의 돈'을 다루는 보험 등 금융산업의 존립 기반이 신뢰인 만큼, 고객가치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

➡ 금융회사의 장기적 수익창출, 임·직원 보수산정 기준 등에 있어 '고객·소비자의 만족도', '경제·사회적 기여도'가 중심이 되도록 '기존 인센티브 체계'를 재설정할 필요

□ 오늘 이 자리가,

우리 보험산업이 공보험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

국민의 경제·사회적 위험(Risk)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

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